

끝나지 않는 ‘재선거’ 시위

극우의 인력에 주류 정치가 끌려가고 있다

(引力)

장호중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는 여전하다. 물론 규모는 줄었다. 지난 6~7일 수만 명이 모였던 것에 견주면, 21일(일요일) 오후 인원은 4,00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극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시위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듯하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추가 폭로되는 한편, 그 관리자들의 무책임과 부패상까지 드러나 극우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도 예고된 터라 이들이 멈출 리 없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모두 살펴보다도 ‘부정선거’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극우는 선거에 부분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 일부는 자신의

주변에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극우(와 윤석열)가 계엄 이후 일관되게 선관위를 문제 삼아 온 반면, 정부·여당은 이들의 부정선거론을 비판한답시고 선거 관리에 ‘아무 문제 없다’며 감싸고 옹호해 왔다.

선관위는 70년 동안 아무 견제를 받지 않고 밀실 행정을 해 왔고, 규모는 작았을지라도 이번과 비슷한 문제들이 이전에도 있었음을 관련자들은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일부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그냥 넘어갔을 테고, 일부는 괜히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울까 봐 애써 침묵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그 슬로건은 이 정치체제에서 선거의 위상(환상에 기초한)을 잘 보여 준다. 선거가 꽃처럼 잠깐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보통 사람들이 맺



장동혁 말고도 국힘을 이끌어갈 극우는 넘쳐난다

는 관계는 결국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가 거의 전부라는 것이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며 분노하는 이 유일 것이다.

그러나 극우 핵심부는 민주주의를 부

정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충격과 분노를 이용하고 체제 불신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이 민주주의자인 듯 목소리를 높이며 세를 키우고 있다. 극우가 사태를 주도하고, 정부·여당은 오히려 끌려가는 모양새다.

국힘의 극우화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선거 다음 날 재선거를 들고나왔다. “이번 선거는 인정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심각하게 오염된 선거입니다.” 그리고 당내 극우의 기세에 힘입어 ‘원조 썬유’ 정점식이 원내 대표로 당선됐다.

극우의 실체가 드러나고 시위 규모가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자 일부가 발을 빼려 하는 듯도 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

6월 17일 국힘은 의원총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11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결정했다. ‘전면 재선거’에서 요구를 삭감한 것이라지만, 패배한 12곳 중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제주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실상 선거 불복을 선언한 셈이다.

장동혁의 입원이 단순히 그가 공지에 몰렸음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입원과 동시에 사퇴 주장은 잦아들었고, 3명만 자진사퇴하면 된다던 최고위원들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극우 시위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동혁

입장에서도 자진 사퇴할 이유가 없다.

장동혁과 거리를 두는 언행으로 기회를 거머쥔 한동훈과 오세훈은 이런 국힘의 지도자(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를 꿈꾼다. 극우가 여전히 이 자들을 기회주의자들로 보기 때문에 이들은 교묘한 줄타기를 하려 할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의 기회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이준석은 장동혁의 전면 재선거를 무책임한 선동이라 비판했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나타나 그 분위기에 편승하려 했다가 실패하니 비난을 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18건의 ‘선별적 재선거’ 소청을 냈다.

개혁신당의 기회주의 DNA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 당 후보 정이한이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 자는 부산의 모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의 아들로, 대학 입학 당시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대입 특혜를 받은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위기의 정부여당, 무엇을 위한 ‘정상화’인가

정부 여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 못 짚고 오히려 우경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패인을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부족한 탓’으로 본다. 그래서 선거 뒤의 인선에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더 분명히 했다.

극우에게 이끌리는 중도보수 세력을 포섭하겠다는 전략이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더욱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역학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선거 패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고 여기고 부동산 세제 개편 계획을 꺼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자산가들의 눈치를 보며 규제와 세금을 ‘최후의 수단’이라며 미뤄왔다. 대신 주식 시장 부양 등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흐르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시장경제적 처방을 고수해 왔다. 대장동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유일하다시피 한 처

방과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병폐인 주택 문제는 시장경제적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고 이재명의 진보적 지지층의 불만은 커져 왔다. 세금 몇 푼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도, 불만을 달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아진(“데드 크로스”) 지금은 더욱 그럴 것이다.

서울 등 주요 격전지에서 패한 민주당 지도부는 차기 당권 다툼에 불을 지피다가 이제는 극우발 재선거 촉구 운동을 오히려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려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원 구성 협상, 개헌론 등 제도권 내로 쟁점이 옮겨 가고 있다. 선거 막판 내건 ‘내란 청산’ 구호도 진심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누구나 느낀다. 윤석열을 옹호한 인요한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임명할 지경이니 말이다.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은 선관위

극우는 위로부터 억누를 수 없다

좌파에게는 당장 어떤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며 쟁점을 제도권으로 끌고 가려 한다. 극우에 끌려가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문제의식은 별로 엇보이지 않는다.

정의당은 장동혁의 전국 재선거를 “99퍼센트 투표소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악선동”이라 옹기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광역비례 선거를 두고 22곳에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극우의 재선거 선동에 힘을 보태는 꼴이다.

또, 정의당은 경찰터러 잡실 올림픽공원 시위대를 “단호히 조치”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가제는 게 편이라고 극우에 관대한 경찰에 단호함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데다 국가 탄압은 노동자와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경찰청장 대행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위대를 해산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표면적 현상 이면에 작동하는 운동의 역학과 물질적 기반을 직시해야 한다. 극우는 법이나 선거로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극우화한 국힘내 일부는 여전히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보지만, 장동혁과 극우 세력에 먹살 잡힌 채 끌려가는 처지다.

위기의 시대에 (자본주의) 국가 ‘정상화’를 지상 과제로 삼는 이재명 정부도 그 인력에 끌려가고 있다.

이는 우연한 소동이 아니라 복합 위기 시대가 낳은 병리적 현상이다. 지배 계급 권위의 위기, 정치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 그로 인한 불안정성이 격렬하게 분출하는 국면에서 극우가 활동할 공간이 열렸고, 이제는 극우의 부상이 ‘정상 상태’가 되는 듯하다.

극우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에 맞선 운동을 거리와 대학에서 아래로부터 건설해야 한다.

6월 19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상급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와 지휘권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1만 4,288곳 중 14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수급이 이뤄졌으며, 26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선관위의 행태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가까웠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관리 인력은 19만여 명이었는데, 일선 투표소에 배치된 선관위 직원은 없었다.

대신 지방직·국가직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이 차출돼 업무를 수행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6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권한만 행사하며 현장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가한 기형적 구조를 비판했다.

선거 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소쿠리나 쇼핑백에 담아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투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결과였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라면서 진상규명에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똑바로 안 하면서 외부 감시와 통제도 거부하니,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가 부패와 무능의 가림막이되다

선관위는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같은 일이나 관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외부 감시와 통제 부재는



현재 선관위의 ‘독립성’은 폐쇄적 조직의 관료적 자율성이다

오히려 조직의 폐쇄성과 비밀주의를 강화했고 부패와 행정 편의주의를 고착화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고위직 자녀 및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 선관위원장 노태약은 2024년 11월 한 달간 단 하루 출근하고 425만 원을 수령했다. 비상임 위원들 역시 회의 불참 시에도 월 215만 원의 활동비를 챙겼다.

노태약이 재임 시절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선관위 예산으로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현재 선관위의 ‘독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중앙선관위원장뿐 아니라 각 지역별 선관위원장은 판사들이 맡는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기구처럼 선관위도 비선출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폐쇄적 조직인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독립성’은 관료적 자율성일 뿐이다. 그런 데다 감사원이나 국회 등의 견제마저 받지 않으니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성격이 되는 것이다.

반극우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선관위의 부패와 선거 관리 부실은 “헌법상 독립”이 민주적 책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개혁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앞으로 다른 국가기구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된다면, 자본주의 국가기구 일반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는 남는다.

더구나 제도 개혁과 개헌으로는 극우의 세력을 꺾을 수 없다. 극우는 체제의 복합 위기에서 비롯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하락을 자양분으로 성장하고 있다. 선관위를 개혁한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신뢰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극우의 기세를 꺾고, 선관위에 분노한 청년들과 극우를 분리시켜 내려면 반극우 대중의 대항 행동이 필요하다. 거리, 일터, 대학, 지역에서 벌어지는 반극우 대중의 투쟁이야말로 극우에 맞설 진정한 동력이고 민주주의의 알짜이다.

그러나 주요 좌파 정당들은 법·제도·선거·국회 차원의 해결책에 집중하면서, 극우에 맞서는 대중 투쟁을 조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00여 명의 후보를 내고 41명이 당선된 진보당은 극우가 선관위를 향한 대중의 불만을 악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실천적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개헌 제안을 추수하고 있다. 15만 당원의 진보당이 반극우 대중 행동을 조직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의당은 당 공식 논평에서 올림픽공원 시위대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은 뒤 일부 지역 재선거와 올림픽공원 시위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재선거 요구는 극우 의제의 주류화에 일조하는 효과를 내고, 경찰의 엄정 대응 요구는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재혁

지금 올림픽공원은 극우 운동의 재기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극우는 2주 넘게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흔히 '부정선거'론 같은 극우 이데올로기는 생각할 거리도 못 되는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일부 좌파 정당조차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에 그 시위대를 주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자발적' 시민으로 보고 감사 인사를 표한 것도 근저에는 이러한 경시가 깔려 있었던 듯하다. "부정선거, 재선거" 같은 극우의 구호가 대중의 참가와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극우의 위장술도 한몫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일부 극우는 극우 이미지가 자신들의 메시지와 전술을 망칠까 우려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두는 척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책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윤 어게인'을 지지한다.

극우의 주장은 합리주의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과장하며 하찮다. 하지만 그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2주 넘게 뜨거운 정치 쟁점이 돼 있다. 이러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극우 운동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현재 극우의 영향력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극우 이데올로기 자체의 힘이다. 둘째, 극우 이데올로기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네트워크와 제도가 있다. 셋째, 특정한 상황과 맞물리면, 아웃사이더의 모호한 이데올로기를 대중이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

극우 이데올로기는 단순하고 명쾌한 서사와 심리적 위안을 제공한다. 부정선거론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 선거 패배를 단번에 납득할 수 있는 '사기극'으로 뒤바꿔 준다. 또한 빈부격차, 청년 실업, 부동산 정책 실패 같은 '진보의 실패'를 "친중·종북·반국가 외부 세력의 조작"이라며 극도로 단순화한다.(음모론에 대해서는 최일봉의 [긴 글음모론: 정당성 위기, 극우 선동,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보시오.)

이를 통해 대중에게 '당신이 힘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이나 좌파 정권에게 속고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분노할 이유를 제공하고, '진실을 깨달은 선구자'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심어 준다.(이러한 현실은 본지에 실



김인식

극우는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얻는가?

김인식

린 '현장 르포: 극우의 인큐베이터,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가다'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제도와 네트워크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수단이다. 극우 개신교, 정당(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혁신당, 우리공화당 등), 미디어, 유튜브, 뉴라이트 학자 등이 그런 구실을 한다. 이들은 반공·반북주의와 친미 노선, '뉴라이트' 식 역사 수정주의, 성소수자 혐오 등 개신교 근본주의 기

반의 문화 보수주의, 음모론과 제도권 불신, 안티페미니즘과 젠더 갈등을 선동한다. 이런 네트워크는 만만찮은 세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재벌 총수도 극우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은 미국의 극우 네트워크인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의 이사장이자 국내 극우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를 수년간 후원해 왔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사태를 놓고 정용진을 감싸고 돌았다.

이 네트워크가 개인들을 결속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실존

극우 반대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운동과 좌파는 극우가 주류 정치 안팎에서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한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적 공포와 강력한 피해의식이다.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모였다.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닌 신념 공동체로 기능하기 때문에 극우는 결코 쉽게 와해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와 일부 좌파 정당이 올림픽공원 시위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추수한 것은 극우의 급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과소평가한 결과다.

네트워크와 개인들을 결속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윤석열이다. 이것은 극우의 비전과 관련돼 있다. 극우의 비전은 국민의힘과 핵심 국가기관들을 장악해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대통령직이다. 원래 윤석열은 우파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하고 보수 진영을 궤멸시켰던 '적폐청산의 칼잡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 후 대통령이 돼 추진한 미국 제국주의 친화 정책과 친기업 정책, 특히 군사 쿠데타 기도로 극우 내 위상이 크게 격상됐다. 윤석열은 극우가 자신들의 이념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려 한 최고의 상징 자산으로 자리잡았다. 극우는 아직까지 윤석열을 대체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정치적 조건

무엇보다, 지금은 극우 정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조건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 이데올로기가 불만이 급등하고 있는 대중의 삶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 덕분에 과거에는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극우 이데올로기가 상당한 영향력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이전에 글로벌 자본주의에 안정성을 부여하던 주류 세력과 정치 시스템이 시나브로 흔들려 왔다. 전통적인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대중의 생활수준 저하와 불평등 심화를 방치하는 무능함을 드러낸 탓이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치가 부상했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총리가 여섯 번 사임했고,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제1당으로 부상하는 등 주류 정치의 혼란이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극우 '마가' 정당으로 재편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년 반 전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가 있었고, 극우 세력이 주류 정치 안팎에서 세를 얻고 있다.

극우는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상황을 틈타 활동한다. 실업자가 늘고 고용돼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질 낮은 일자리에 좌절하거나 채무로 인한 금전적 불안정에 시달린다. 상황이 악화됐을 때 자기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고립감이 엄습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가 '1만피'를 향한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상승장의 파이는 상위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른다는 뉴스는 매일 나오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

극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난 불만을 파고들며 정치적 탄력을 얻고 있다. 때마침 투표용지 부실 사태가 벌어지자, 극우는 교활하게도 '민주주의자' 행세를 하며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서 비롯된 소외와 환멸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평등권과 교육·취업의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특히 청년들이) 겪는 일상적 경험은 이 권리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음을 매일 확인해 준다. 유려한 민주주의의 이상과 터무니없는 비민주적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상처, 무력감, 열등감, 자괴감, 부적격성, 시기심 등의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가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이용해 자신을 민주주의자로 포장하고 있다

감정을 내면 깊숙이 안고 살아간다.

극우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자신들의 삶이 망가진 것에 깊은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한다. '선관위, 이재명 정부, 기성 언론, 빨갱이, 중국과 북한 간첩이 한통속이 돼 우리 삶을 망가뜨린다!'

그 효과는 단지 선거 행위를 냉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윤석열의 계엄 합리화를 선동한다. 올림픽 공원 집회장에는 "윤석열이 옳았다 간첩 OUT" 같은 구호가 적힌 종이 가 곳곳에 붙어 있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가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빌미로 자신을 민주주의자로 포장하는 역겨운 상황이다.

인큐베이터

일상화된 불안정은 광범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 심리학적 상황은 터무니없는 극우 이데올로기마저 번창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극우 이데올로기에 100퍼센트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만 수용해도 이미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첫발이 될 수 있다.

극우는 동조자를 적극적 지지자로, 적극적 지지자를 간부로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는 중이다. '자유대학'의 심재홍의 유튜브 방송은 이 과정의 역학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선거 재선거 해야 된다. 이거 선거 잘못됐다.' 이거부터 같이 한 팀이라는 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엄 덕분에 우파가 돼서, 윤 대통령 계엄 덕분에 윤 대통령 탄핵 막으려고 나왔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케이스처럼 요번 선거 용지 부족 사태 분노해서 나왔다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면 전두환·박정희·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씨앗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 씨앗을 우리가 다 갖고서 잘 이쁘게 키워서 우리 우파의 새로운 그룹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극우의 위험성은 비단 공공연한 폭력에만 있지 않다. 보통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그들을 가치 있고 자격 있는 존재로 인정해, 극우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성이다.

본지에 실린 "현장 르포: 극우의 인큐베이터,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가다"는 이 과정을 잘 보여 준다. "B씨는 직장과 동네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주에 회사 가면 여기서 들은 얘기 좀 해 보려고요. 중국 프레임 바뀌어야죠."

극우에 맞서기

극우를 물리치기 위한 비상한 투쟁을 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극우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일축해서는 안 된다. 극우 운동은 임계점에 도달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시작

했다. 극우는 그저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둘째, 극우 반대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거에서 극우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에 의지해서는 결코 극우를 저지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선거 중심주의에서 대중 투쟁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민주당과의 협조 노선(민중전선)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 정부로서 과거의 '정상 상태'를 복원하려 애쓸 뿐이다. 좌파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며 '과거의 정상 상태'에 '진보적' 색칠을 할수록 중도파와 구별되지 않고 동일시될 뿐이다.

넷째, 노동운동과 좌파는 극우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 광범한 공동 행동으로 극우가 주류 정치 안팎에서 득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섯째, 극우가 민주주의자 행세를 하는 것에 맞서, 그들이 속죄양 삼는 개인과 집단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극우의 인종차별적 이주민·난민 배제나 성소수자 혐오를 결코 놔둬서는 안 된다.

여섯째, 혁명적 좌파는 정당성 위기를 겪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극우와 대결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전망에 갇히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경찰에 극우 단속 요구하기,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등 위로부터의 해결책만 추구한다. 그런 길은 극우를 저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극우 저지에 필수적인 대중의 열정과 행동을 결코 이끌어내지 못한다.

영국 노동당 총리 키어 스타머 불명예 사임

긴축, 인종차별, 가자 집단학살 지지의 귀결

영국 노동당 총리 키어 스타머가 사임했다. 지난주 메이커필드 보궐선거에서 당내 유력 차기 총리 주자인 앤디 버넘이 승리하자 스타머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당 대표 선출 일정은 7월 9일 시작되는데, 그러면 9월에 새 총리가 선출될 것이다.

버넘은 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 노동당 우파 웨스 스트리팅도 경선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스타머는 퇴임 연설에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배경 음악으로 깔고 악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년의 "치적"을 늘어놓았다. 스타머는 눈물을 삼키며 "2년 만에 우리가 이룬 성과를 보라"고 말했다.

스타머는 노동당 정부가 "긴축을 끝내고" 노동자들과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리 취임 후 처음 그가 한 일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아동수당을 자녀 두 명까지로 제한한 것을 유지해 100만 명 넘는 아이들을 빈곤 속에 방치하고, 연금 수급자 1,000만 명의 겨울 연료비 지원금을 삭감한 것이다.

고용권리법은 대기업들을 달래면서 누더기가 됐고, 임차인권리법은 세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인 높은 월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스타머가 나열한 "성과들" 중 실질적인 것들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극우와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스타머는 "냉전 종식 이래 국방비 최대 증액," "이주민 유입 저지," "난민 숙소 폐쇄"를 성과로 자랑했다.

아동성애범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틴의 친구 피터 맨델슨을 주미 대사로 임명했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2007년 이래 영국 국가는 세계 금융 위기, 브렉시트, 코로나19, 이스라엘 지지에 따른 정당성 상실로 타격을 입어 왔다



물러나는 스타머 거듭되는 위기와 불안정 속에서 지난 10년 사이 영국 총리는 여섯 차례나 교체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전기와 수도를 끊을 권리가 있다'는 발언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지원한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당이 트랜스젠더 + 사람들과의 전쟁을 격화시킨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스타머는 어떻게 2년 만에 이토록 처참하게 몰락했을까?

주기적인 위기가 정치 시스템을 거듭 휩쓸고 있다. 2007년 이래 영국 국가는 세계 금융 위기, 브렉시트, 코로나19, 이스라엘 지지에 따른 정당성 상실로 타격을 입어 왔다.

지난 10년 사이에 총리가 여섯 번 갈렸다. 반면, 2007년 금융 위기 이전에는 30년 동안 총리가 고작 세 번 교체됐다.

이런 불안정의 뿌리는 1970년대의 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기는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하락하며 영국 국가가 휘청이던 가운데 이윤을 위기가 다시 찾아온 때였다.

그에 대한 영국 지배계급의 대응은 신자유주의였다.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들었지만, 양대 정당과 유권자들 사이의 괴리는 깊어져 갔다.

서민들은 정치적·경제적 결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에도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2007년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각국 지배계급들은 긴축 재정을 추진

하고 이민자 희생양 삼기에 열을 올렸다. 이는 극우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해 줬고 극우에 "권력층 반대" 세력을 자처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정설 신자유주의도 살아남지 못했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 국가 개입에 훨씬 더 의존하는 운영·조직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과정은 1945년 이래 서방에서 우세했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의 붕괴와 결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스타머와 그의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는 "바이드노믹스"를 모방하고 싶다고 했다. 바이드노믹스란 미국의 전임 바이든 정부가 국가의 경제 개입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대(對)중국 경쟁력을 높여려 한 것을 일컫는다.

“노동당식 개혁주의”

지난 10년 간 영국은 경제 성장이 더뎠다. 노동당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증세와 차입으로 투자를 늘려야 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부유층과 금융 시장의 심기를 거스릴까 봐 그러지 않았다. 대신 긴축 2.0을 추진했다. 그 후 국정 '쇄신'과 우향우가 거듭됐다.

스타머는 노동당 정치 전통의 가장 매력 없고 밥맛없는 대표자의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당이 노동계급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은 "노동당식 개혁주의"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서 의회가 노동자 투쟁보다 중요하다

는 노선이다.

노동당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동계급의 염원을 표현해 왔지만, 영국 국가의 운영권을 갖고 '국익'에 따라 통치하고자 한다.

문제는 은행가·기업주·건물주와 노동계급 사람들이 공유하는 국익이란 없다는 것이다.

'국익'에 따라 통치하는 시도는 결국 지배계급이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 호황기에는 이윤 추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제공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스템 전체가 경기 부진, 기후 혼란, 전쟁 위협으로 흥역을 치르고 있다.

이제 대기업들은 쥐꼬리만한 양보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온건하기 짝이 없는 개혁도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누더기로 만들라고 노동당에게 요구해 왔다. 스타머와 리브스는 여기에 기꺼이 응해 왔다.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충분한 부가 있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대기업과 맞서고 시장과 단절해야 한다.

노동당 차기 대표에 도전하는 버넘은 스타머와 달리 부자들의 권력에 맞설 의지가 있을까? 모든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해 버넘은 노동당이 채권 시장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7면으로 이어짐

이스라엘은 왜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는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이란 합의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6월 20일 이란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레바논 공격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란과 별일 협상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 때문에 엮어질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6월 19일 이스라엘에 헤즈볼라와의 휴전 협의를 강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 47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레바논 남부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안보 장관 벤그비르스는 6월 19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인 어머니 한 명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자식이 있는 레바논 여성 1,000명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 레바논 전체를 불태워야 한다! 우리의 전사들이 차지한 땅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안보상 필요 때문에 레바논 남부에 완충 지대를 확보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측의 설명을 그대로 전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진실은 이스라엘이 정착자 식민 국가로서 끊임없이 확장주의를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착자 식민주의(즉 정착자 식민들이 기존 토착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타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다. 그것의 지리적 범위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세력 관계에 따라 결정돼 왔다.



확장주의는 강탈에 기초한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에 내재돼 있다

레바논에서도 이 점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부터 드러났다. 당시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고 추방하는 ‘나크바’를 일으키면서 레바논 남부의 14개 마을도 점령했다. 그리고 그중 적어도 10개 마을에서 주민들을 내쫓거나 살해했다. 이후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휴전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철수했지만,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통제하려는 야욕을 줄곧 드러내 왔다.

그 야심은 단지 극우 시온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흔히 ‘대(大, Greater)이스라엘’로 번역되는 ‘에레츠 이스라엘’은 사실 그냥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1919년 시온주의자들이 구상한 ‘이스라엘의 땅’에는 요르단강 양안, 레바논 남부, 시리아의 골란 고원이 포함됐다. 노동

당식 시온주의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 벵구리온도 그러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러한 정착자 식민 지배와 확장주의에 맞서 팔레스타인·레바논 등지에서 끊임없이 저항이 이어져 왔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안보상의 필요’는 식민 지배자의 관점에서 그런 저항을 제압할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후 1967년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1972년과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해 그곳에 근거지를 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분쇄하려 했다. 1982년의 침공은 1979년 이란 혁명과 뒤이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중동 질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자국에 가장 유리한 재편을 이뤄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 후 이스라엘은 2000년까지 18년간 레바논 남부를 점령했다.

헤즈볼라는 그 점령에 맞선 민족 해방 세력으로서 부상한 것이다. 저항에 밀려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한 이스라엘은 2006년에 다시 침공을 감행했지만, 헤즈볼라와 레바논 민중은 다시금 이스라엘에 굴욕을 안겨 줬다.

헤즈볼라가 이란 정권을 지지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류 언론들의 묘사와 달리 헤즈볼라는 그저 “이란의 대리 세력”이 아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 속에서 기반을 닦은 대중 운동이다.

2006년 이후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의 일부에 편입돼 기존 사회 체제와 타협하고 후퇴하는 방향을 추구했다. 이는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충돌을 빚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가에 편입될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저항 세력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이스라엘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첨단 기술과 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자본 축적의 중심을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더 공세적으로 야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경비견이지만, 주인이 쥔 리드줄을 더 강하게 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결코 제발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파탄 내려 할 것이다. 그럴수록 미국의 모순도 깊어질 것이다. 이원웅

▶ 6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그 후 내내 버넘은 그 발언을 희석시키고 대기업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버넘은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말이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그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경제의 근본 동력을 통제하기를 아예 포기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경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버넘은 리브스가 노동당의 긴축 재정을 정당화하려고 세운 “재정 준칙”에 손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버넘은 기업주들과 은행가들에게 자신의 “재정 책임성”을 확인시켜 주려고 주류 경제학자 세 명을 고문으로

영업했다.

그중 한 명은 영란은행(영국의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출신인 앤디 홀데인이다. 다른 한 명인 리처드 휴스는 예산책임장을 지냈던 자다.(예산책임장은 보수당 정부 시절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이 긴축 정책을 감시하려고 만든 기구다.) 나머지 한 명인 짐 오닐은 보수당 정부의 장관과 골드만삭스 애셋매니지먼트의 회장을 지냈던 자다.

온갖 “연성 좌파” 행세에도 불구하고 버넘은 스타머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중도 정치를 대표한다.

버넘은 노동당의 재정 준칙을 고수하고 긴축 재정을 지속하겠다는 뜻만 밝힌 게 아니다.

버넘은 노동당의 인종차별과 권위주의 강화와 단절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해 왔다. 단절은커녕 오히려 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궐선거 선거운동에서 버넘은 내무장관 사바나 마흐무드의 이민자 단속 계획을 지지했다. 이민 문제에서 영국개혁당보다 한 술 더 뜬으로써 영국개혁당을 앞서겠다는 스타머의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뒤 버넘은 트랜스젠더+ 사람들을 저버리고 평등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적 지침(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역사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이는 버넘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영국개혁당·영국재건당 등 극우에 맞선 장벽이 되지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 새 정부는 오히려 극우·파시스트의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것이다.

스타머의 몰락에 기뻐하자. 그러나 한 명의 중도 정치인을 다른 중도 정치인으로 바꾼다 해서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계급 투쟁을 건설해 변화를 쟁취해야 한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출처 Tomáš Tengely-Evans, 'A Keirful end for Starmer after two years of backing austerity, racism and genocide' (2026. 6. 22) / 번역 김준호

한-EU 공동성명, 미 상원의 '전작권 환수' 견제구 ...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6월 10일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을 두고 평소 한국 외교의 “승미” 성향을 비판해 온 많은 진보 인사들이 개탄했다.

이경렬 전 대사는 6월 18일 <민플러스> 칼럼에서 공동성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등 대북 압박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규탄, 중국을 겨냥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반대’ 등이 담겼음을 지적했다. 즉, “우리의 언어는 간데없고 EU와 미국의 강경 담론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한-EU 공동성명에서 평화공존은 뒤로 밀린 채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대결적 프레임이 앞세워졌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 진보 인사들은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는 한국의 외교 전통을 폭로하고, 옳게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또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처지에서 벗어나 자주화(또는 전략적 자율성)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기대를 걸었고, 이재명 정부가 자주화로 나아가도록 독려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일본의 핵폐수 방류에 반대해 거리 시위에서 선동하는 등 민주당의 많은 보수적 정치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을 것이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비판 글을 올리자, 이경렬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의 자주적 언어”가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 문법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한-EU 공동성명을 보고 많은 진보 인사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던 평화공존과 자주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실천적으로는 “대미 추종”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비판의 주된 초점을 다시 승미파에 맞추고 있다. “정부 내 승미파의 준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경렬). 승미파 인사들(아마 위



미국 상원 군사위



미국 상원 군사위

좌파의 물음은 ‘종속이나, 자주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주인가”가 돼야 한다

성락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외교가 실현되지 않게 정부 내부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한-EU 공동성명과 달리 여전히 “전략적 자율성의 언어”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외교 사고”?

그러나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 승미파의 농간으로 주되게 설명하거나, 또는 심사숙고 없이 벌인 “외교 사고”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듯 ‘종속이나, 자주냐?’ 하는 프레임으로는 이재명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력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 지난해 한미 협상을 합의하며, 이재명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단지 미국의 압박을 거스르지 못해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이 한미 합의 결과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트럼프를 직접 설득했다. 핵추진 잠수함 등 자체의 군사력 강화 (“자주 국방”)를 미국 전략에 대한 협력과 연계했던 것이다.

미국의 불만

그러나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전략과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가끔 미국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6월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의 전작권 환수 과정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관련 보고서에는 한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악의적 영향력 행사”가 우려된다며 전정부 장관에게 내년 5월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 권력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갖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등 미국의 중요한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나온 불만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에만 주목하며, 이재명 정부가 몇몇 사안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진보로 보고 환영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독자적 “국익”이라는 더 상위 지향성을 놓치게 된다. 이재명은 한국 국가의 이익(국익, 즉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나름의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 위치에서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한국 지배계급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일부 갈등을 빚는 맥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1960~1970년대에 아류 제국주의를 연구한 브라질의 마르크스주의자 후이 마우루 마리니는 아류 제국주의 국가들이 단순히 미국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국 같은 우세한 제국주의 국가와 “대립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류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보호한다는 계

▶ 9면으로 이어짐

이재명 정부는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김어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6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19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교육부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침묵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첫째, 교육부는 방학 22주 중 단 4주 분만 대학 시간강사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중등 교사와 기간제 교사, 대학 전임교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이 유독 대학 시간강사들만 비켜 간다. 대학 비정규 교수들은 방학이라는 보릿고개가 너무 힘들다.

둘째, 교육부는 사립대와 국립대 비정규 교수들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외면한다. 사립대 비정규 교수들의 시간당 임금은 국립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국립대 10만 2,000원, 사립대 6만 원).

2019년 강사법에서 주당 강의 시수를 6시간 이하로 제한해 시간강사 평균 시수가 4~5시간임을 고려하면, 대학 시간강사 강의료는 생활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한 시간 강의에 강의 준비 및 채점 등 여러 노동시간이 필요한 데도, 이는 강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5만 4,000원 수준이다. 16년 동안 거의 동결돼 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실질임금 삭감이다.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 개선 외면하는 정부. 6월 15일 교육부 앞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셋째, 정부는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조차 70퍼센트만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교양강좌 축소와 폐강 등으로 시간강사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넷째, 논문 심사료도 본인 부담인 비정규 교수들에게 그나마 '한 줄기 가느다란 햇살'이었던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자원사업 예산마저 올해 삭감됐다. 선정률도 20.4퍼센트로 대폭 낮아졌다. 지원 자격도 높아져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92개 대학에서 비정규 교수들은 전체 강의 인원의 6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체 강의의 40퍼센트를 담당한다. 한 음대의 경우 강사 비중이 80퍼센트에 이른다.

그런데 정작 비정규 교수들의 임금은 대학 재정 전체의 2.5퍼센트에서

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착취이다. 비정규 교수들이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마주해 가르치고 평가하며 채점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대학 당국과, 무엇보다 교육부가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힘겹게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력 생산 과정에 드는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대다수 노동계급 가정의 허리가 휘다. 그런데 그 숙련 노동력을 강의실 현장에서 생산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생활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걱정과 불안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오늘도 연구 노동을 힘겹게 이어 가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힘겹게 공부해 대학에서 만나게 될 교수진의 절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4월 29일 정부가 내놓은 문제투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은 실태조사에서조차 배제됐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 교육의 책임은 명백하게 국가가 져야 한다. 국방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대학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사립대학들이 쌓아 놓은 재단 적립금을 시간강사 임금 인상에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학의 재단 적립금은 2024년을 기준으로 11조 원이 늘어났다. 100억 원 이상 급증한 사립대도 17개교에 달한다. 고려대학교는 342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시간강사 임금은 십년 넘게 묶어 두고 있다.

최근 부산대 비정규 교수들은 171일의 천막 농성 끝에 2,500원 임금 인상, 논문장려금 10만 원 증액, 제미니 유료계정 제공 등의 성과를 얻었다. 참으로 소중한 승리다.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칠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 주체들이 이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싸워야 한다. 이것이 참교육이다.

▶ 8면에서 이어짐

획을 미국과 공유하면서도, 때때로 미국과 갈등을 빚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갈등과 협력 사이의 균형은 고정돼 있지 않고 가변적이다. 그럼에도 아류 제국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애쓰며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협상하거나 종종 그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한국은 아직 아류 제국주의의 반열에까지 오르지 못했지만, 그 잠재력과 지향성을 고려하면 이 갈등과 협력의 프레임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 지배계급은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세력 균형이 이전보다 중국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고, 다른 자본주의 주요국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틈바구니에서 나름으로 책략을 부려서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잠재력도 있다. 한국의 국력은 극적으로 성장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히 강해졌다. 미국의 무상 원조나 일본의 차관에 의존하던 약소국에서 반도체와 조선 등 강력한 제조업과 4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군사력을

가진 "중견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런 고속 성장과 기존 국제 질서의 변동에 힘입어, 한국의 고위 국가관료와 자본가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이런 변화를 의식한 선택이다. 즉, 한국 지배계급이 제국주의 시스템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좌파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평가할 때 던지는 물음부터 바꿔야 한다. 이경렬 전 대사는 <민플러스> 칼럼에서 이런 물음을 던졌다. "미국이 묻는 충성에 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나 한국 국

가의 독자적 이익 추구를 지지한다는 전제를 공유한다면, "중견국" 한국이 미국 제국주의와 협력하고 갈등하면서도 자체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으킬 위험을 간과하게 된다.

좌파는 "누구를 위한 자주(자율성)인가?"를 물어야 한다. 한국 국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한 자율성인지, 아니면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자유와 연대를 위한 것인지 말이다. 제국주의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좌파는 '우리' 정부의 아류 제국주의 지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김영익

6월 29일 2차 파업 예고한 카카오 노동자들

“희생에 걸맞은 보상 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6월 29일) 카카오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할 예정이다. 파업은 “로그오프 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업무를 멈추고 작업장에서 ‘로그오프’한다는 취지다.

이날 파업에도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노동자들이 함께한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6월 10일 4시간 파업 일주일 후 교섭이 재개됐지만 사용자 측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글로벌 AI 빅테크들과 경쟁” 속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은 고통은 분담하고 성과는 독식하려고 한다”고 이를 비판한다.

한 노동자는 “그 전에는 어렵다면서 참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면서 성과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다.

성과급 ‘뒤통수’와 분노

지난 파업 집회에서 이흥열 카카오 노조 부지회장은 사용자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규탄했다.

“카카오톡 개편 프로젝트가 추진되던 시기를 똑똑하게 기억한다. 회사는 무리한 일정과 비현실적인 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노동자들을 밀어붙였다.

“노동자들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조차 포기했다. 건강도 희생했다.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월 30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이후 진행된 노동부 감사에서 법정근로시간한도 위반, 연장근로수당 지연지급 및 일부 미지급 등 다양한 위반이 적발됐다.

“당시 최고제품책임자였던 홍민택과 대표이사 정신아는 분명하게 말했다. 크루들의 희생과 노력에 걸맞은



6월 10일 파업 집회에 참가한 카카오 노동자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인당 1,500만 원 심지어 3,0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언급했다.

“우리들은 믿었다. 힘들어도 참고 버텼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많은 노동자들이 한 달 월급에도 못 미치는 성과급을 수령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급했다.”

한 노동자는 올해 성과급을 대부분 300~4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것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반면 대표 정신아는 5억 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았다.

이런 차별과 노동자 무시에 맞선 성과급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카카오 노동자들이 상대적 고임금이라며 이들의 요구가 이기주의인 양 비난하지만, 카카오 노동자들의 요구는 착취로 빼앗긴 몫의 일부를 찾으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성과급으로 노동자들 개개인을 경쟁시키려 했다. 그러나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둔 상황에서 성과급은 오히려 ‘다 같이 더 받자’는 취지의 단결을 불러오고 있다.

한 카카오 노동자는 “삼성전자 투쟁의 여파로 성과급이 강조되면서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사이에서까지 기대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말했다.

카카오 투쟁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서 영향을 받았듯 카카오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하청 연대”

자회사들에서 진행돼 온 구조조정 중단도 중요한 요구이다. 카카오는 지난 2년 동안 자회사 50여 곳을 정리했다. 이 때문에 자회사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IT 초호황기에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린 카카오는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자회사들을 정리하며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디케이테크인은 올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이 2퍼센트에 불과했다. 엑스엘게임즈는 정리해고까

지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어렵다며 임금을 억제해 와 놓고, 지난해 500억 원 넘게 영업이익이 났는데도 노동자들을 홀대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카카오페이 임원 급여는 32.2퍼센트 늘었는데 직원 급여는 왜 2.9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나”며 사측을 규탄했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원하청 연대 투쟁을 약화시키려 이간질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연대가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본사 임금은 뒷전이고 자회사 고용안정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사용자 언론들이 본사 노동자들이 단독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나의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들이 연대해 함께 싸우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더러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서승욱 지회장은 10일 파업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카카오 공동체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 [한 곳에서] 권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하면 곧 더 많은 공동체 내에서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 연대는 해결책을 만드는 힘이다.”

다른 노동자 역시 본사와 자회사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자회사라고 해서 다르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가 아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연대는 특히 투쟁의 장에서 힘을 발휘한다. 단결해 싸울 때 시너지가 난다.

지난 파업 집회에서 카카오 노동자들은 판교를 가로질러 행진하면서 IT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9일 카카오 노동자들의 하루 파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카카오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부족한 보상과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고통받아 온 많은 IT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안형우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인터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체류 보장해야 합니다”

6월 14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이 이주 인권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단속 중단’ 요구를 넘어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행동을 발의한 이영 신부(성공회)를 만나 미등록 이주민 체류 보장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이영 신부(성공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한 책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2023)을 출간하는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2003년 마석에 처음 왔습니다. 당시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에 대다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어요.

그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합법화 조치를 했는데, 대상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가 많았고, 명동성당, 성공회 성당 등 전국 각지에서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가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살림의 집’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농성단을 구성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다 보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꽤 많은데요. 36년이나 된 친구도 있어요.

마석은 생활공간과 일터가 붙어 있고, 이주민 밀집도가 한국에서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주민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교회에서 종을 치면 5분 안에 모일 수 있을 만큼 근거리고 있고, 일 끝나고 전화해서 ‘저녁 먹으러 갈게, 괜찮아?’ 하고 걸어 내려가서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전달된 게 없습니다. 단속 중에 죽거나 다쳤다는 이야기뿐입니다.

한번은 20년 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간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마석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

고 청춘을 다 바친 곳인데, 20년 동안 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이곳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석에서 일했던 비두는 이주노동자 활동을 하다가 표적 단속으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 책도 쓰게 됐죠.

이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을 핵심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인권 변호사 시절 도왔던 필리핀인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산재를 입고 강제 출국됐던 노동자입니다. 그때부터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른바 지게차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하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서 논의했어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비숙련·저임금에 고착되지 않도록 준숙련, 숙련 단계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 이뤄졌습니다.

35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용자들이 새 제도를 따라 이주노동자가 한국어·기능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대신 이

미 숙련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쓰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법무부가 미등록자 합법화를 포함해 제도 개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운동 진영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마석의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지금이 미등록 문제를 공론화할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감을 얻어서 6월 14일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20년 넘게 체류권 보장이 안 됐는데 집회 한 번 했다고 되지는 않겠죠. 향후 계획을 논의해 가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체류 기간 5년 미만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합법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면 전면 합법화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어떻게 해 나갈지 논의해야 합니다.

6월 14일 집회 때 마석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운동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체류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고 외치더라고요. (웃음)

예배가 끝나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가 저 친구와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까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매주 만나고 인사했던 친구가 갑자기 단속되면, 그 빈자리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며 느낀 체류 보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단속 현장을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2005년 출입국 미니버스 2대가 들어와서 30여 명을 단속했을 때 버스를 막고 10시간 넘게 대치한 일도 있었죠. 2008년에는 경찰 중대 1개와 출입국 직원 100여 명이 와서 군사작전 하듯이 단속했어요. 10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몇 명은 수술도 받았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단속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본인만 아니라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끝납니다.

출입국은 단속을 피하다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를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합법’인지 미등록인지 확인도 안 하고 외국인이면 우선 수감 채워서 차에 태운 다음 신원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이탈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매년 1만 명 정도 발생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체류 기간 연장도 사장이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노비 문서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미등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 비자로 들어와서 미등록이 되는 사람들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세계적인 빈부 격차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묻지 않고 ‘불법’ 낙인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임준형



사진: 김경택(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과 연대하자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6월 17일 현대중공업 소속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개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결의대회에는 이주노동자 250여 명을 포함해 300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데 부담이 컸을 텐데도 일을 마치고 참석해 '나쁜 계약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투지를 보며 집회 참가자들은 고무됐다.

앞서 6월 13일 울산이주민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이주노동자 200여 명이 참가해 투쟁 의지를 다지고 요구안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에 시달려 왔다. 원하청 정주노동자들은 회사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지만, 이들은 월급에서 매달 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이 넘게 공제됐었다. 또, 하청 소속 이주노동자들도 받는 연말 성과급을 1원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내놨는데, 식비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급과 수당 등 20여 만 원 삭감, 연 2회 인사평가 신설, 기본급·성과급 차등 인상, 저평가자 계약 종료 등 개악안을 포함시켰다. 스

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새 계약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자, 사용자 측은 기본급 7만 원을 덜 삭감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하겠다는 등 위협했다.

17일 결의대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폭로하고 개선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기본급 삭감

첫째로 발언에 나선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그는 가뜩이나 월급이 적어 힘들었다며 이번 근로계약서가 나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약하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이 모두 미등록 신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싸우자고 독려했다.

다른 이주노동자는 퇴근 후 5~6명이 작은 방에서 함께 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소개했다. 여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 현실에 놀라는 분위기였다.

이어 그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정주노동자보다 차별받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같은 이주노동자이지만 직고용 이주노동자가 하청 소속 이주노동자도 받는 성과급을 못 받은 것에 분

노를 표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소비를 적게 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반박했고,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폭언을 근절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새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며 투쟁에 나서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도 사용자 측에 항의 공문을 보냈고, 17일 결의대회 주최 단체로 함께하는 등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다. 김동하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결의대회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체계 변경에 맞서 싸울 것이며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층 정주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결의대회 후 나를 포함해 5명의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지지 연서명을 발의했고, 단 5일 만에 현대중공업 노동

자 82명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차별을 박살 내자', '이주노동자 차별 반대' 등의 연대 메시지도 남겼다.

6월 23일에는 전국의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해 현대중공업의 개악된 근로계약서 강요를 규탄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승리하려면 실질적인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서로 연결돼 있다. 특히 같은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조건 개선에서 성과를 낸다면 정주노동자들의 2026년 단체교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는 6월 26일(금) 저녁 7시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투쟁문화제에 많은 노동자가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대를 확대해 나가자.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인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과 극우의 준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6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 한국열린평생교육원 5층 강의실 (부평역 1번출구 앞 50미터)

발제 김문성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인천지역모임 문의 010-6224-2157 / incheon@ws.or.kr